

#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아베 과거사 사과하라”

### 하원의원들 본회의장서 특별 연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일본의 과거 전쟁에 대해 반성한다고는 밝혔으나 사죄 등은 표명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동회의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차 대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사죄’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 연설에서 1955년의 반동회의에서 확인된 10원칙 가운데 ‘침략, 무력 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두 원칙을 강조한 후 “일본은 이 원칙을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어떤 때라도 지켜나가는 국가일 것을 맹세했다”고만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가난을 뿌리 뽑고 질 높은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앞으로 5년 동안 두 대륙 주민 35만여명에 대해 교육 훈련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반동회의의 연설에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에 명기됐던 ‘식민지 지배와 침략’ 표현 등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올여름 발표할 ‘전후70년 담화’에서도 이들 표현이 담기지 않을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는 10년 전 반동회의의 50주년 기념회의에서 이들 표현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 ‘사죄’ 표현을 담을지에 대해 “(과거 담화)와 같은 말을 담을 것이면 (군) 담화를 낼 필요가 없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한 이상 다시 한번 쓸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오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을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찰스 랭글(민주·뉴욕)·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은 21일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아베 총리는 이번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이날 연설은 일주일 뒤 아베 총리가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하원 본회의장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연설은 지난 2007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7) 할머니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았다.

연설을 행한 의원들은 모두 친한파이지만 미·일 안보·경제협력과 별개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한 미국 의회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언론에 이어 의회까지 나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명시적 반성과 사과를 촉구함에 따라 아베 총리로서는 29일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커다란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미국에 도착한 이용수 할머니는 워싱턴 전진대책위원회(회장 이정실) 관계자들과 함께 본회의장 방청석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청취했다.

이 할머니는 “아베 총리가 미국에 온 다기에, 내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 왔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아베 총리는) 역사의 증인들을 똑똑히 보라”며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친중국-민주화 시위대 총돌

22일(현지시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행정장관 선거 방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되자 홍콩 입법회 건물 밖에서 오성홍기를 든 친중국 시위대(왼쪽)와 노란 우산을 든 민주화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당백’ IS... ‘오합지졸’ 이라크군

### 군사전문가 일치된 견해

수개월에 걸친 국제동맹군의 공습에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맥클라치 신문을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동맹군이 지난 수개월 동안 거의 매일 시행한 맹렬한 공습에도 IS는 여전히 ‘놀랄만한’(surprisingly) 높은 수준의 군사적 기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 이라크 내 쿠르드족 자치 군을 대상으로 군사 자문을 하는 한 전문가는 이라크 정부군이 어렵게 방어에 성공한 바지르 정유소에 대한 IS의 공격 동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공습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IS의 작전 내용을 담은 여러 동영상은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라크 정부군에 대해 훈련, 사기, 보급 측면에서 IS는 여전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라크군이 열세임을 인정했다.

전술 면에서도 IS는 우수성을 입증했다. 바지르 정유소를 기습하는 과정에서 IS는 교과서적인 보병 전술을 발휘했다.

능숙한 화기 조작 솜씨도 눈에 띄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이동과 간격, 사격 과정에서의 절제력 등을 살펴보면 전술 측면에서 IS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라크 정부군에 대한 평가는 혹평에 가까웠다. 실탄 보급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일선에 배치된 병력이 식량과 식수를 알아서 챙겨야 하기 때문에 결국 민간인들을 상대로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게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불만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 한미 원자력협정 42년만에 개정 사용후 핵연료 처리 논의 본격화

에 필요한 ▲ 조사후 시험(Post-Irradiation Examination) ▲ 전해환원(Electro-reduction) 등 연구활동도 우리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사후 시험은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을 띠는 물질의 특성 등을 (차폐된 시설에서)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생산한다.

전해환원은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전반부 공정으로, 사용후 핵연료 내에서 발생시키는 원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협정은 한미가 공동 연구중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양국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즉, 한미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등 세부기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 원자력협정은 ▲ 중간 저장 ▲ 재처리 및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 영구 처분 ▲ 영국·프랑스 등 해외 위탁 재처리 등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들에 대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 방식을 담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전처리)이란 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유용한 자원을 추출해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이용률을 높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협정은 또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 中-대만 주석 내달 4일 회동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4일 중국에서 대만 집권 국민당 주석(당대표)과 회동할 예정이다.

내달 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10회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제무역문화포럼(국공농단)에 참석하는 주리룬(朱立倫·53) 국민당 주석이 논단에 이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만날 계획이라고 왕보(旺博) 등 대만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대만 현지 언론들은 국민당 고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주 주석이 다음 달 4일 시 주석과 회동 후 당일 밤 베이징에서 돌아오는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회동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했다.

한편, 주 주석은 시 주석과 회동에 앞선 3일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위정성(俞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공동으로 국공농단을 주최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72) 전 중국 국가주석과 쉐롄(連戰·78)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이 양안 분단 이후 첫 국공농단을 가진 이후 정례적으로 논단을 개최하고 있다.

### 中, 인구 천만 도시 15개

인구 천만 명이 넘는 생활하는 거대도시가 중국에 15개 존재한다고 참고소식(參考消息)이 22일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광저우(廣州),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허얼빈(哈爾濱), 난징(南京) 등을 포함한 중국의 15개 도시가 인구 천만이 생활하는 거대도시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통계는 행정구역이 아닌 도시기능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유엔 통계에는 중국의 거대도시가 5개로 나와 있다.

중국에서는 또 지난 35년간 농촌인구 5억 명이 도시로 이주하는 등 도시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해 파이로프로세싱 활동에 대해 장기 동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재처리 및 재활용 조항은 우리가 현재 보유한 시설에서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풀고 필요한 미래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추진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이라 설명된다.

기존 협정은 조사후시험 등 사용후 핵연료 처리 필요한 미래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추진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이라 설명된다. 기존 협정은 조사후시험 등 사용후 핵연료 처리 필요한 미래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추진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이라 설명된다.

/연합뉴스

### 日 국회의원들 야스쿠니 참배

야스쿠니(靖國)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이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참배했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도쿄도(東京都)도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단체로 방문해 참배했다. 이 모임은 작년 춘계 예대제 때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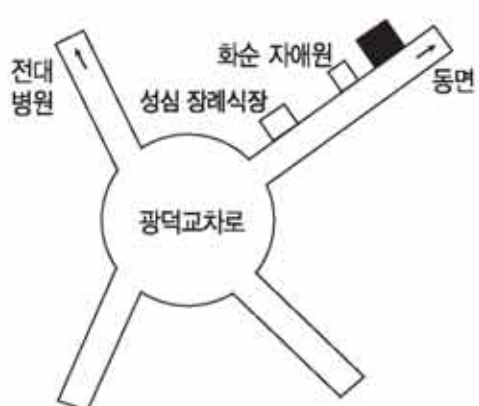
의원 147명, 추계 예대제 때 111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는 등 매년 봄·가을 제사와 패전일(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했다.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엔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인 ‘마사카키’를 봉납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衛藤一) 총리 보좌관은 21일 직접 참배했다.

##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20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 완공 예정
- 매매가 - 1억 3120만원(평당 40만원) 분할매매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공동중개 환영합니다)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 전망좋은, 2013년 신축
- 방 2, 화장실 1, 거실, 베란다
- 내부깨끗,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1억 2천만원 정도
- 매매 - 1억(대출 7천만원 가능)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첫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7400만원(용 1억 1천만원 포함)

##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매매



문의. 010-3605-5000 (공동중개 환영합니다)

##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욱비 / 임정활동비 사무실 사용료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